

추 법무장관은 위법한 지휘권 발동을 즉각 철회하고 사직하라

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친 언행을 통하여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단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치졸한 법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.

그 연장선상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발동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8조를 끌어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지시 중단과 서울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한 배제 등 막가파식 지시를 하고 있다.

그러나 3일 전국 검사장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직 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존중해야 할 규범적 관례를 무시하고 극히 삼가야 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오남용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번 구성원들 의 판단이다.

청와대와 여당을 대리한 추 장관이 현재 이처럼 무리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실체가 없는 검 언유착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에게 흠집을 내고 궁극적으로 조기 사퇴하게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.

검찰의 올바른 길에 따라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중인 검찰총장을 마구 흔들어 내치고 우리 쪽 사람으로 바꾸겠다면 이것이 온당한가? 이는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치 시녀화 시도일 뿐이다.

여권은 검찰총장 흔들기와 검찰의 정치시녀화를 즉시 중단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라. 추 장관은 위법한 수사지휘를 즉각 철회함은 물론 사법체계 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. 대통령과 국회는 해임, 탄핵 등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망동에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.

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추 장관을 비롯하여 이 음습한 모의에 가담한 자들 모두, 머지않은 장래에 직권남용죄로 엄히 벌 받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라.

2020. 7. 5.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한번)

회장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